

##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과 금지청구\*

—대법원 2005.1.17. 선고 2003마1477 결정을 소재로 하여—

### The Demand of Prohibition and Defamation by Media

배성호(Bae, Sung Ho)\*\*

#### ABSTRACT

In order to a libel or slander case, there must be a objective disgust or contemptuous concern. Which means just infringing the emotion of person's honor doesn't mean accepting a libel case by the law. However, when we see those infringing the emotion of person's honor cases, we have to consider the all the sorts of audit and inspection, such as contents, methods, periods, places, in order to exist as libel cases. There might be several cases that disturbing the personal rights or person's privacy. There is a civil salvation way that stipulated the compensation damage and regaining the impaired reputation, but those salvation has practical limitations. which means those compensation has been dissatisfied, and those impaired reputations are also unrecoverable entirely.

This brings us a question rather it permits the prohibiton before the infringement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this essay, I will mention about reasoning and requisite of the prohibition demand about the libel by the media in the concrete.

Key Words: 언론의 자유(Free press), 인격권 보호(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명예훼손(Defamation, libel, slander), 불법행위(tort), 금지청구(the demand of prohibition)

## I. 사안의 개요

### 1. 서

종교잡지를 출판, 판매하는 채무자의 종교잡지에는 종교단체인 채권자를 교리적인 방법으로 순수하게 비판한 내용도 있지만, 채권자가 그 명칭을 변경한 경위, 채권자 교회의 구성원에 관한 부분, 교주의 교리에 관한 주장, 종교단체를 이탈한 구성원에 대한 폭행사실 등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침해를 배제하고 예방한다는 이유로 종교잡지의 집행관 보관, 그 인쇄, 제본 및 판매 또는 반포의 금지 등을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원심(서울고법 2003. 7. 29.자 2003라362 결정)은 채무자가 비판행위를 함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고, 서적제본행위도 위법성이 없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인용하면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당사자

○ 채권자 X(○○○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 종교단체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정해진 법인 아닌 사단이다.

○ 채무자 Y<sub>1</sub> 은 '현대종교사' 라는 종교잡지사의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 '현대종교' 라는 월간종교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람인데, 본건 출판물 {'한국의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연구집 I(부제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이라는 서적} 의 발행인이고, 채무자 Y<sub>2</sub> 는 위 출판물을 제본한 사람이다.

### (2) 채무자 Y<sub>1</sub> , Y<sub>2</sub> 의 출판물의 출판 등 행위

○ 채무자들이 출판하는 본건 출판물 중 145면 내지 168면에 채권자 교회를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다.

- '하나님의 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분파된 단체이다. 그러나 안식교가 조사심판설, 율법적인 구원관등으로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부활과 영생, 삼위일체,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단체는 1985년 사망한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로 자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처럼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머리말을 싣고, 1988년, 1994년 등 계속되는 시한부종말설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 1999년에는 특히 와이투케이(Y2k) 등의 사회여론과 이에 편승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를 바뀌가며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유포하는 한편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름을 ○증인회라고 하였다가 전도에 지장을 초래하자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었다. ○씨의 첫 번째 소위 영적인 부인은 x씨였다고 전해진다. x씨는 ○과 관계되기 전에 전남편과 이혼하였고, 1978년 ○씨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씨 사후 ○증인회는 첫 부인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인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파와

1981년 ◇씨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 세우고 둘째 영적 부인을 어머니로 섬기는 파로 나뉘어졌으며, 생전의 ○이 늘 환웃을 즐겨 입고 해운대 빈민가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사는 것을 고집했으며, 예배시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없다. ○증인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몇 가지 성경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간추려 보면 시편 132편 10~18절에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여기 일곱 뿔은 일곱절기를 상징한다며 절기에 관한 교리를 찾아낸 ○씨 자신이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이라고 주장한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품은 자를 영혼의 사냥 대상으로 삼고 접근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약간의 기독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비적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도할 때 처음부터 ○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지난 2000.2.29.에는 하나님의 교회 ○증인회를 이탈하여 이 단체의 실체를 공개한 △모씨가 신도 400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 채무자 Y<sub>1</sub> 은 2002.5.6.부터 2002.7.27.까지 사이에 위 출판물 2,000부를 발행하여 전국 기독교서점에 약 500부를 배포하여 판매하였다.

#### 나. 사건의 경과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제1심결정을 인용하면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의 요지】

채무자 Y<sub>1</sub> 이 이 사건 서적에서 채권자 X의 일부 주장과 같이 채권자 X에 대하여 비판행위를 한 사실, 채무자 Y<sub>2</sub> 가 이 사건 서적을 제본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 Y<sub>1</sub> 의 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그 표현 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그 비판행위를 함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Y<sub>1</sub> 의 채권자 X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고, 채무자 Y<sub>2</sub> 의 서적 제본행위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

#### 【재항고이유의 요지】

##### 1.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령위반

○ 원심은 종교적 비판이 표현행위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과 단순히 언론출판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표현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출판 등 금지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령위반이다.

##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령위반

○ 본건 서적이 유통될 경우에는 채권자 교회의 본연의 기능과 포교활동, 채권자 교회 소속 신자들의 종교적 자유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들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은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령위반이다.

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고, 이러한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심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와 같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입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 3. 대법원 결정 요지

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써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

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써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고, 이러한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심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304조),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II. 研究

###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보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회가 사람에게 부여하는 객관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sup>1)</sup>

명예훼손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혐오 또는 경멸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sup>2)</sup> 다만 명예감정의 침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행한 표시의 내용, 수단 내지는 방

1) 대판 1988.6.14, 87다카1450; 대판 1990.2.27, 89다카12775; 대판 1997.10.28, 96다38032; 대판 1999.2.9, 98다31356 등

2) 대판 1992.10.27, 92다756; 대결 1997.7.9, 97마634는 중중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족보등록발간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인 중중이 주장하는 신청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청인 중중이 명예감정을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개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청인 중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 그 시기 장소 등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인격권·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민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sup>3)</sup>(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상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 등이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구제수단이 되고 있으나, 저하된 사회적 평가에 대한 구제로서는 미흡하여 현실적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침해가 현재화되기 전에 사전적 구제로서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청구의 인정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상기의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언론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침해의 정지를 구할 수 있고, 그 권리가 명백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명문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라고 하여 금지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일반법리에 의한 금지청구권보다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격권 보호의 심중함과 그 법적 성질을 고려한다면 다소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결 2005.1.17, 2003마1477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표현물의 발행, 판매, 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을 처음으로 실시한 대법원판례로서 의의가 크고, 그 동안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대부분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당부만을 판단하였으나 이 결정은 처음으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물의 배포 등이 사전 금지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 대법원결정을 소재로 하여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청구의 인정근거, 인정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에 앞서 본 논의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도 직접적 연관을 갖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경계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 명예보호의 충돌과 조정

### 가. 서

하였다.

-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5.1.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본 법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언론 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중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는 모두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이하 ‘언론의 자유’라 한다)의 한계를 확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범위가 넓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의 성숙한 진행을 위한 건전한 여론형성이라고 하는 언론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언론의 본래적 기능과도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에 인격권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이들 양 법익의 조정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나.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은 1988년 처음으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형량과 관련하여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이러한 사적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그 뒤 2002년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의 기준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

4) 대판 1988.10.11, 85다카29

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sup>5)</sup>라고 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정정보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sup>6)</sup>고 하여, 개별적 이익형량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사인의 경우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sup>7)</sup>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개인의 언론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알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듣고, 읽고, 보는 이른바 알권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이 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자

5) 대판 2002.1.22, 2000다37524 · 37531

6) 헌재 1991.9.16, 89헌마165

7) 헌재 1999.6.24, 97헌마265



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며, 소수의견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적 언론이 숨쉬는 열린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다수의사로 결집·형성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만들고 가꾸는 민주제의 참된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이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법리’의 적용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는 뒤에서 금지청구권의 허용요건의 검토과정에서 다시금 언급하기로 한다.

(3)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와의 조정에 있어 이익형량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좀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낼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sup>8)</sup> 또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sup>9)</sup>

### 3.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청구의 근거

가. 우리 나라에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청구, 취소 및 철회청구 등이 인정되며, 나

8) 헌재 1991.9.16, 89헌마165

9) 대판 2003.7.8, 2002다64384; 대판 2003.7.22, 2002다2494; 대판 2003.9.2, 2002다63558; 대판 2004.2.27, 2001다53387

가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도 인정되고 있다.

독일<sup>10)</sup>과 일본 등은, 명문의 규정에 의한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프랑스, 스위스와는 달리,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독일, 일본과 같이 인격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써 금지청구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1980년대부터 법원실무에서 인정하여 오다,<sup>11)</sup> 대법원은 1996년 처음으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sup>12)</sup>

대법원은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이후 본고의 대상결정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표현물의 발행, 판매, 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나. 우리 나라에서는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불법행위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sup>13)</sup>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를 발생케 하는 근원인 위법행위의 배제, 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는 불법행위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다.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권적 청구권에서도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을 인정하는데 하물며 고의·과실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둘째, 부작위청구권의 인정여부는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활동제한이라는 손실과 그로부터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들 청구권의 인정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도를 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의 배제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14)</sup>

셋째,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15)</sup>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소유

10) BGHZ 26, 52. 독일에서는 성명권 등 개별적 인격권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침해제거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 인격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1) 서울민지결 1987.12.4, 87다카53922; 서울민지결 1988.2.27, 87다카6203; 서울민지결 1988.6.20, 88카28987; 서울민지결 1992.5.16, 92카44613 등

12) 대판 1996.4.12, 93다40614

13)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8, 455-456면.

14) 박윤직, 채권각론 제6판, 2003, 447면.

물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적용법규가 다르다. 소유물방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있는 민법 제214조가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편에 있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규정에 따라 발생하지만,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 판례는 인격권의 본질 등을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sup>16)</sup> 그 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았다. 대상 결정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절대권 내지 지배권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인격권으로서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에 관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인격권과 물권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만큼이나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인격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절대권의 일종으로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금지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설과 인격권설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두 견해는 양자를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만큼 사람 자신에 대한 권리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sup>17)</sup> 즉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권은 그 침해를 금지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설인 물권권 청구권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4. 출판물의 출판 등의 금지가처분이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검열에 해당 여부

출판물의 출판 등의 금지가처분에 의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는

15)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언론자유나 사전예방이나 제4회, 한국언론법학회, 22면; ; 양창수,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1, 1991, 525면; 이영준, 물권법, 신정판, 2001, 517면; 이근웅, 출판물에 의한 가처분, 재판자료 제46집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하), 1989, 369면; 윤철홍,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고찰, 민사법학 제16호, 1998, 225면;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220면;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451면.

16) 대판 1996.4.12, 93다40614, 40621; 대판 1997.10.24, 96다1785

17) 김재형, 인격권 일반, 민사판례연구 21, 1999, 637면 이하.

개별적인 사인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법원에 의해 당사자의 신청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등의 사법상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심리하여 판단·발령하는 것으로서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sup>18)</sup>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최고재판소 역시 1986년 판결에서 가처분을 인정하되 “출판물이 공무원 또는 공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 등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sup>19)</sup>

## 5.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청구의 허용요건

가. 이상과 같이 금지청구가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금지청구의 요건과 관련하여 학설은 이익형량설, 고도의 위법성설, 현실적 악의설 등이 주장되고 있고, 판례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개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이익을 비교해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형량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sup>20)</sup>

나.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의 주관적인 의도는 금지청구를 하는 단계에서 언론기관이 보도하려는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보도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언론사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보도하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보도금지가처분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보도하려는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임이 증명되었다면, 이를 보도하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sup>21)</sup>

금지청구는 손해배상의 경우보다는, 좀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고 다만 비방의 목적만이 있을 경우, 중대하고 명백하게 회복곤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때에 금지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sup>22)</sup> 따라서 보도하려

18) 헌결 2001.8.30, 2000헌바36

19) 日最高判 昭和61(1986).6.11.

20) 대판 1988.10.11, 85다카29

21) 김재형(주 15), 28-29면.

22) 황도수,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법리와 실제, 언론중재 1998년 여름호, 14-15면; 한위수(주 15), 453면.

는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보도내용의 일부만이 허위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금지만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지청구를 허용하지만, 이는 언론보도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sup>23)</sup>

그러나 가해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sup>24)</sup> 그것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함은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침해되는 인격권의 주체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사인의 경우와는 그 심리기준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sup>25)</sup>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의 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현실적 악의의 법리”란 공적 인물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거나 진실을 부주의로 인하여 무시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상황 하에서 전체적으로 부적당한 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분노·적의·악의를 가지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믿을 수 없거나 편향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원에 피고가 의존한 경우, 발행인의 정보제공자의 진실성 또는 보도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원래 가능성이 없거나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주장 등의 경우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언론기관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판례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sup>26)</sup>도 있었다. 그러나 근래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23) 김재형(주 15), 30면.

24)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1979, 220면.

25) 김민중, 공적 존재·공적 관계와 명예훼손책임—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저스티스 통권 제75호, 145면 이하;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131면 이하 참조.

26) 대판 1997.9.30, 97다24207; 대판 1998.5.8, 97다34563 등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sup>27)</sup>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을 확연히 설정하는 판결<sup>28)</sup>을 내린 바 있다.

## 6. 결론에 갈음하여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고 다만 비방의 목적만이 있을 경우, 중대하고 명백하게 회복곤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때에 금지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도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침해되는 인격권의 주체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사인의 경우와는 그 심리기준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도내용의 일부만이 허위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금지만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7) 대판 2002.1.22, 2000다37524·37531

28) 同旨 대판 2002.12.24, 2000다14613; 대판 2003.7.8, 2002다64384; 대판 2003.7.22, 2002다62494; 대판 2003.9.2, 2002다63558; 대판 2004.2.27, 2001다53387 등

이와 같이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지청구를 허용하지만, 이는 언론보도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검열에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히 신중함을 요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환,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민사판례연구 제25권, 2003
- 김민중, 공적 존재·공적 관계와 명예훼손책임—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저스티스 통권 제75호
-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호, 2005
-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언론자유나 사전예방이나 제4회, 한국언론법학회
- , 인격권 일반, 민사판례연구 21, 1999
- 김선택,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3호, 2004
-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 2004년 봄호
-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법조 제51권 제8호
- 배병화, 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 민사법연구 제13권 제1호, 2005
- 이균룡,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의 허용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54호, 2006
- 이재진,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미국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0년 봄호
- , “설리번판결과 미국의 언론자유: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원칙의 40주년을 맞으면서”, 언론중재, 2004년 여름호
-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1979
-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언론과 법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 , 공인의 명예훼손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2004년 봄호
- ,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제기와 명예훼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
-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